

<성명>

다카이치 총리의 침략신사 야스쿠니 공물 봉납을 강력히 규탄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026년 4월 21일, 취임 후 처음 맞는 야스쿠니 신사 춘계예대에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군국주의 회귀를 시도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행위는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무단 합사된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의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제 파시즘의 심장부였으며, 현재까지도 시대착오적인 군국주의의 명령을 숭배하는 '침략신사'이다. 이곳은 도조 히데키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을 '영령'으로 추앙하며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아시아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전쟁'으로 미화하는 야스쿠니 사관을 신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총리가 침략신사 야스쿠니에 공물을 봉납하는 행위는 식민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피해국 시민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는 처사이다.

더욱 참담한 것은 2만 1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 희생자들이 유족의 동의도 없이 '천황의 신민'이라는 굴레에 갇혀 침략전쟁의 가해자들과 함께 지금도 야스쿠니에 합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된 지 80년이 지났음에도 침략전쟁에 군인·군속으로 끌려가 희생된 강제동원 희생자들은 여전히 일제가 강요한 일본 이름으로 야스쿠니에 갇혀 식민지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버지를 일본의 전쟁터에 빼앗기고, 지금도 무단 합사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들은 지난 25년 동안 일본의 법정에서 희생자의 무단 합사를 철폐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12월 23일, 한국인 희생자 유족 10명은 마침내 대한민국 법정(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야스쿠니 한국인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일본 사법부가 외면해 온 인권과 존엄을 되찾고, 무단 합사를 공모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다.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는 지금이라도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며, 야스쿠니에 갇힌 희생자들을 해방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야스쿠니에서 합사된 희생자 이름을 지우는 것을 넘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라는 동아시아 시민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야스쿠니 무단 합사가 완전히 철폐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4월 21일

민족문제연구소/식민지역사박물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